

頭腦韓國(BRAIN KOREA) 21과 개혁

1. 推進背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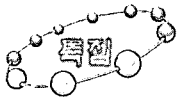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새로운 知識과 技術을 創出하고 活用하는 能力이 사회 발전과 경제 성장의 동력이며 國家의 進運을 좌우하게 된다. 컴퓨터, 초고속망, 통신위성 등을 통하여 국경을 제한 없이 넘나드는 지구촌 환경의 국제적 무한경쟁에서 생존을 가능케 하는 것은 전략적 비교우위 개념의 지식과 기술인 것이다. 따라서 지식과 기술을 외국에 의존하는 나라는 밝은 미래가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는 주체는 창의적 인재임으로 一國의 대학 등 高等人力養成體制가 創意的 人才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育成하고 活用하느냐가 國力을 決定짓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21세기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인력 양성투자과 아울러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大學의 構造/過程과 文化의 革新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98년 당시 여러 국제 비교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가간 지식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여전히 새로운 지식의 창출/활용과는

고 용

국무총리실 교육문화 심의관



무관한 세칭 국내의 일류대/인기학과 “學士科程(Undergraduate) 진학”만을 위한 소모적이며 비생산적인 경쟁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었던 반면(’98년 기준, 사교육비 10여 조원-공교육 예산의 1/2 수준), 21세기 지식기반국가로의 발전을 주도함에 있어 국가 고등인력양성체제 중 핵심엔진으로서 세계 수준의 교육/연구를 수행하는『大學院(Graduate)』에 대한 국가 전략적 관심과 투자가 매우 취약했다. 우리 대학원의 교육/연구역량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후발 국가에 비해서도 뒤떨어져, 독자적인 지식과 기술을 생산하기보다는 외국의 대학이 생산한 지식을 수입하고 전달하는 데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우수 인력이 여러 대학에 小規模로 散在해 있어 세계적 수준의 경쟁에 요구되어지는 적정 규모 단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러한 대학의 수준, 특히 대학원의 교육/연구능력과 수준을 높이지 못하면 우리 지식/기술과 산업의 국제경쟁력은 구미 선진국을 따라 잡기는 커녕 중국과 동남 아시아 국가들에게 마저 추월 당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될 지도 모르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98년 당시 각종 國際指標〉

국제적 학문·연구수준(’97, SCI) : 한국 17위, 서울대 126위
국제적 대학평가(’98 Asia Week) : 서울대 아시아 6위
인적자원의 국제경쟁력(’98 IMD보고서) : 22위
교육·지식부문 간접 해외의존도 : 경상수지적자 12억불(대학부문 7억불)

두뇌한국21 (Brain Korea 21, 이하 BK21로 약칭)은 IMF관련 국가 경제 위기에 처했던 어려운 여건 하에서 ’98년「국민의 정부」 출범 직후 바로 위와 같은 우리 고등교육현실에 대한 뼈아픈 반성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우선, 당시의 한정된 재정여건과 대학개혁의 절박성 차원에서 두 가지 국가 전략적 목표를 설정했다. 첫째, 大學院(Graduate)에 중점을 둔 『世界水準의 大學院』과 學士科程(Undergraduate) 내실화에 역점을 둔 『地域優秀大學』을 연계하여 集中 育成함으로써, 국내·외 산업체와의 產學協同과 해외의 경쟁력 있는 대학과 國際協力 방식을 통하여 향후 지식기반국가로서의 발전을 주도할 첨단 지식·기술 분야의 창의적이며 국제적인 고급두뇌를 중점적으로 육성 확보하고자 하였다. 둘째, 이 사업을 大學構造/過程과 大學(院) 新入生 選拔銓衡制度改革과 연계함으로써 그 동안 대학교육의 불모로서 초·중등교육의 파행과 고질적이며 막대한 과외비 부담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했던 대학 신입생선발 전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初·中等 公教育을 正常化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취지 하에 BK21은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는 ‘第2의 建國’ 사업의 핵심 중의 하나로서 ’99년부터 2005년까지 7년에 걸쳐 총 1조 4,000억원의 신규 국가예산 투자가 결정됨으로써 교육부의 최대규모 단일사업이 되었으며, 대규모 BK21 관련 投資를 教育改革과 연계하여 추진할 목적으로 現 ‘국민의 정부’가 大學 新入生 選拔銓衡制度를 초점으로 한 일단의

'98년~'99년 시행 教育改革 綜合政策과 BK21 관련 制度部門 改革事項을 상호 면밀하게 연계하여 企劃하게 되었다.

여기서는 상기한 목표를 위해 BK21의 추진 전략으로 구안한 주요추진원칙과 개혁사항들과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 종합정책의 취지와 내용에 관해 설명하고자 한다.

II. 事業推進 原則과 方式

'BK21'은 21세기에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갈 세계적 수준의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는「人力養成事業」을 기본방향으로 하였다. 따라서, 그간 교육부가 시행해 왔던 각종 대학 재정지원이나 각종 교수 연구비 지원사업, 과학기술부 등 각 정부부처에서 추진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각종 연구개발 (R&D 예: ERC, SRC, RRC 사업 등)사업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다음의 네 가지 원칙을 정하였다.

1. 選擇과 集中 原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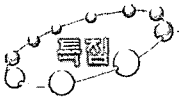
전국 대학의 지식/기술 창출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것은 21세기를 대비하는 국민의 정부가 떠맡아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이다. 하지만 모든 분야를 일시에 육성하기에는 국가 재정이 너무나 부족한 관계로 부득이 단 시일 내 國際的 比較優位를 確保할 수 있음으로써 국가 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尖端理工分野를 중심으로 제한된 자원을 集中으로 投資하는 것이 현실적인 戰略이었다. 따라서, 국가산업경쟁력에 직결되고 국제적 비

교우위 확보가 가능한 정보통신(IT)과 생명관련분야(BT) 등 과학기술 전략분야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직접 연계되는 특화 분야의 경쟁력 있는 대학원의 인력양성을 집중 육성하고자 했다. 또한 현재의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역량과 발전 가능성을 지닌 동시에 독자적 지식/기술 창출능력을 획득하기 위해 自律改革과 構造/過程調整을 단행할 意志를 가진 大學의 競爭力 있는 分野를 選擇的으로 支援하고자 했다.「選擇과 集中의 원리에 입각한 世界水準의 大學院 育成」, 이것이 BK21의 第1原則이다.

2 世界水準의 創意的 先導人力養成

교육부의 기본임무는 창의적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으며, 대학은 사회가 요구하는 실무인력과 아울러 우리의 지식산업을 선도할 후속세대를 배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학원 석·박사 과정 및 젊은 Post-Doc 인력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통해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는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제공하고, 다양한 재정적·행정적 지원과 폭넓은 국제교류 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대학원 설치기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대학사회에 교육/연구에 집중하는 경쟁적 문화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2천억원 이상의 신규 예산과 1천억원의 기존 학술연구 조성비 등 年 3천억원 이상인 BK21관련 투자예산의 60% 이상을 大學院生の RA/TA 인건비, Post-Doc 연구원, 계약제 연구교수 채용을 위한 직접 지원비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바로 이것이 과거 주



로 대학 교수의 연구비와 대학의 시설을 지원하던 기존의 대학지원사업과 BK21간에 명확한 차별성을 보여주는 가장 뚜렷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國際競爭力 있는 創意的 後續世代 先導人力養成」중점지원, 이것이 BK21의 第2原則이다.

3. 財政支援과 大學改革 連繫

BK21은 또한 교육/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학사과정(Undergraduate) 학생정원 감축과 신입생 선발 전형제도 개혁, 교수 평가(교육/연구 업적과 인사 연계), 대학원의 문호개방 등 대학의 제도 개혁과 문화 쇄신을 연계했다. 대학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대학간의 신입생 점수에 근거한 경제적 서열구조와 획일적인 대학 신입생 선발전형의 질곡에서 파행을 면치 못하고 있는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한 줄 세우기 식의 대학서열구조를 지양하고 여러 분야별로 특성화된 경쟁력 있는 구조로 전환하여야 하며 초·중등 학생의 개성과 창의성을 존중하여 생각하는 힘과 남을 배려하며 삶을 즐겨워하는 학생중심의 교육문화를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大學(教授/學生) 스스로 현실에 안주케 하는 풍토를 쇄신하기 위하여 大學의 構造/過程 및 制度를 改革하고 文化를 一新하여 大學(院) 教育/研究 力量的 획기적인 增強과 初·中等教育의 正常化에 共助하고자 하는 自律的 改革意志가 필수적인 바, 이를 財政支援 必須條件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財政支援과 教育改革 連繫」, 이것이 BK21의

第3原則이다.

4. 知識基盤의 均衡發展

地域優秀大學事業은 수도권 이외의 우수한 地域大學의 學士過程(Undergraduate)의 教育(Teaching)을 지원함으로써 서울 등 수도권 대학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우수한 지역인재들이 인근지역의 학사과정을 거쳐, BK21에 의해 선택/집중 육성조건으로 30% 정도 학사과정 학생정원 감축과 타교(학사과정)출신에게 50% 이상 대학원 입학정원 문호개방 협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권역별 (예: 전국 서울대 대학원-중부 KAIST 대학원-영남 POSTECH 대학원-호남 광주과기원) '세계수준의 대학원'에 진학하는「新진학모형」으로 연계되는 동시에 지역/권역별 산업사회 인력수요를 충족함으로써 국가 지식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다.

아울러, BK21의 국가전략 목표와 사회수요에 따른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중심으로 한 세계수준 및 특화분야 대학원사업 참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로 수도권 이외 지역의 우수 대학원만을 대상으로 한 핵심분야 大學院 研究力 提高事業 및 學術振興基盤事業은 불균형을 예방하고 대학의 지식기반을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확충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BK21에서는 전체 사업예산 (약 3000억원) 중 40% 이상을 위의 세 사업에 배정하고, 「1人 教授- BK21관련 1 事業團 參與 原則」을 준수하기 위하여 BK21의 모든 사업은 同時에 公告함으로써 重複 支援의 不均衡을 最大限 抑制함으로써 지식 분야별 발전의 균형을 추구하고자

했다.

5. 推進方式

가. 産學協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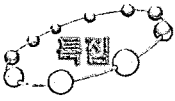
BK21사업에서는 특히 산학협력을 크게 중시하는 바, 세계수준의 대학원육성 사업 등 전체 사업에 걸쳐 산업체와 共同으로 Project-Based 인력양성관련 課題를 선정하여 Curriculum을 刷新하고 Project 成果를 産業界에 移轉 (Technology & Knowledge Transfer) 하는 등을 내용으로 産業體와 協約을 締結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産業界는 일정액의 對應資金을 지원 하는 한편, Curriculum 및 Project 성과에 대한 評價·管理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産學協同委員會를 조직하게 함으로서 첨단 지식 기술의 실수요자인 산업체와 기업의 역할을 크게 강화하였다. 또한, 세계수준의 대학원사업에 참여 선정지원 된 서울대학교 등은 지식/기술 창출을 위한 국가차원의 선도적 역할기대에 따라 여러 반발을 무릅쓰고 철저한 집중/선택 원칙에 의거 추진하였던 바, 1차 7년이라는 BK21 지원기간이 종료되면 지원대상에서 전원 卒業 (Graduation)시키고 向後 BK21 2次 7個年 計劃에서는 1차 계획 기간 중 참여하지 못한 대학을 중심으로 국가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기에, 현재 지원 중인 대학 사업단의 지원 종료 卒業 後 自立基盤의 構築을 주요 과제로 고려하였다. 따라서 위의 Project 成果 移轉 관련 産業化를 위한 特許權 등 산업재산권/지적재산권 관리의 체계적이며 공식적 관리를 통한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으로서의 經營自立體制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지역 우수대학육성사업의 학사과정 (Undergraduate)지원에 있어서도 세계수준의 대학원육성사업과 동일한 취지에서 産學協同 教育을 교수 평가 및 인사제도와 중점적으로 연계하고 대학·기업·地方自治團體가 공동 참여하는 産·學·官 協同委員會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대학은 산업체와 공동으로 현장실습, 산학겸임교수 채용 등 지역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과제를 선정하는 한편,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산학협동교육의 성과인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 취업률 제고, 외국어 및 정보처리능력의 향상 등에 주력하도록 하였다.

나. 國際協力

특히 BK21에 있어 또 하나의 특징적 사업 추진방식으로 대학/정부 공동의 국제협력사업을 기획했다. 동 사업은 국내 대학들이 先進 Bench-Marking 外國大學과 交流·協力體制를 構築하여 고급두뇌 人力養成에 있어서 外部 動力 (External Forces)으로 活用하고, 외국 우수대학의 교육/연구 과정과 방법, 성과이전 등과 관련된 質위주의 競爭的·經營的·需要者·情報化 重視 文化 (Culture)가 반영된 선진 체제·제도적 Infrastructure의 전수 도입 활용을 촉진하게 함으로써 우리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국제수준으로 도약의 기반으로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 세계 수준의 대학원 육성사업 및 지역우수대학에 참여하는 대학(원)생들에게 해외 우수대학에서 장·단기해외연수 실시, 외국 우수대학과 현지 산학협동 현장실습 (Research Internship) 등의 협력프로그램 개설 지원, 우수 외국인교수 초빙, 교수/대학(원)생 팀 국제학술대회 참가 지원 및 향후 2003년에는 위성방송



· 인터넷 등 첨단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원격 교육/연구 협력 프로그램을 구안했다.

6. 事業 推進機構 및 協約, 評價管理

BK21이 총 7년간 추진되는 장기 사업임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BK21 추진관련 법규를 제정하고, 대학원 제도 개혁을 위한 대학원설치 기준의 제정, 교수평가와 인사제도의 연계 등을 통한 경쟁과 보상체제 구축, 외국인의 국립대학교 교수채용관련 규정보완 등으로 교육/연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업 선정단계에서 대학 제출 신청서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위해 장관 자문기구로 BK21의 종합조정 기능을 하는 기획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별 전문심사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두며, 기획조정위원회의 경우 외국 학계/산업계, 국내 산업계, 국내 학계 인사(언론계, 지방자치단체 포함)를 4:3:3 비율로 구성하여 세계수준의 대학원 집중 육성이라는 목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국제적 기준에 의해 사업단을 선정할 수 있도록 고안했다.

그리고, 동 위원회의 엄정한 심사·평가를 거쳐 사업단을 선정한 후에는 정부와의『協約』체결하여, 사업단별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엄격한 평가 관리,『選定 후 3개월 내 實事』를 통하여 제도 개혁 관련 주요 학칙 제·개정 사항, 사업단 구성 관련 자격요건, 산학협동 관련 과제 공동선정·대응자금의 확보 등 협약사항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연도별로 매년 산업계 대응자금의 실제 대학에 입금여부,

사업비 항목/용도에 따른 집행실적, 사업과제 수행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지원과 연계하며, 학사과정 신입생 선발전형제도, 교수업적평가와 인사·급여 연계, 사업비 중앙관리제, 대학원 문호개방, 학사과정 학생정원 감축 등 制度改革 協約事項에 대해 2002년까지 매년『中間評價』를 실시하여 약속 불이행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協約을 解止하며, 아울러 각 사업단별 사업목표 및 과제 관련성과에 대해『國際評價團』을 통해 동일 분야의 2-3개 복수사업단간 경쟁 촉진구조로 선정된 사업단들을 비교평가하여 사업단별로 계속 지원 또는 지원을 중단하는 嚴正한 事業管理 틀을 구상하였다.

Ⅲ. '국민의 정부' 教育改革綜合政策과 連繫

이와 같이 창의적이며 국제수준의 인력양성을 위하여 大學構造/過程 改革과 學士過程 新入生 選拔銓衡 등 관련대학제도 개혁을 목표로 한 BK21은 '국민의 정부'가 '98년-'99년 기간 중 시행한 일단의 教育改革綜合政策의 주요 單位政策들과 면밀히 상호연계 되어 있다. 주요 단위정책으로는 첫째, BK21사업의 서울대 등 주요대학의 2002학년도 學士過程 新入生 選拔銓衡制度改革 (교장추천입학제 전면확대와 의/법학분야 등 국가 인적자원의 왜곡 활용이 초래되는 소위 인기학과와 전문대학원-Professional School 前 단계로서 신입생 모집단위 광역화)정책 둘째, BK21의 수도권 이외 지역 고교생의 隣近大學 進學誘導 關聯政策 셋째, 2002학년도 大入修學能力試驗의 發展政策 넷째, 高校內申 關聯 全國 單位 學力評價制 導入 및 隨行評價 關聯政策 다섯째, 교장추천입학 관련

學校運營委員會 政策이다. 여기서는 BK21의 중점 개혁 사항들과 5개 주요 단위 정책들간의 연계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서울대 등 2002學年度 學士科程 新入生 選拔銓衡制度 改革政策

'98년 경제적 위기의 상황에서 무려 1조 4천억 원의 혈세를 신규 동원한 BK21의 서울대 2002학년도 대입제도개혁정책은 BK21의 核으로서, 교장추천 입학제 전면 확대와 의학/법학분야 모집단위의 광역화 또는 전문대학원제를 양대 축으로 하는 서울대의 2002학년도 學士過程(Undergraduate) 大入制度改革을 前提 條件으로 하여, 「국민의 정부」가 BK21에서 서울대 大學院(Graduate)을 集中 支援하는 것이다.

특기사항은 서울대의 동 대입제도개혁 중요성을 서울대 차원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현실적 인식 아래, 정부의 서울대 대학원 집중지원 조건과 서울대의 학사과정 대입제도개혁 약속을 교육부-서울대간 공적으로 문서상 第1協約 형태로 맺고, 동 협약을 최우선 주요사항으로서 개혁약속 違約 時 政府 支援의 全面 解除를 사업 공고 시부터 명기한다는 것이며, 또한 동 공고문의 주요내용 중 정부지원 신청대학의 대입제도 개혁약속 등이 포함된 신청서 내용을 BK21 Web-Site 公開하도록 하여 서울대의 2002학년도 대입제도개혁 公約은 최소한 '98년 9-10월경 -당시 중3의 고교진학 지원 개시 시점인 11월 고려- 에는 국민 앞에 공개 확정할 것을 의무화 조치의 일환이었다.

2. 隣近大學 進學誘導 政策

BK21사업의 수도권 이외 지역 고교생의 隣近大學 進學誘導政策은 BK21에서는 「地域優秀大學 育成事業」에 총 3,500억이 동원되어 出身 高校 隣近에 所在한 大學의 學士科程(Undergraduate)에 進學을 誘導하기 위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위의 BK21의 大學院분야 지원과 긴밀히 연계되어 새로운「高校 - 大學 學士課程 - 大學院 進學模型」의 일환으로 구상한 것으로서, 위의 수도권의 지역학사과정지원사업이 첫째 단위정책인 서울대 등 대학원 지원과 상호 연계하여 新進學模型 構築이라는 정책목표방향에 시너지효과를 내도록, '99년. 6월 BK21의 第2, 第3 協約 형태로 BK21 대학원 분야 지원을 받게된 서울대 등은 自校출신 학사과정 졸업생의 경우 서울대 등 自校 대학원 진학을 50% Quota 이내로 制限 (進學 Imbreeding)하고, 동시에 BK21의 대학원 분야 지원을 받게된 서울대 등은 自校 학사과정 학생정원을 25%이상 減縮토록 하여 인재독점을 완화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총 사업기간 7년 동안 정부지원과 연계하여 대입제도개혁 약속을 포함한 협약 이행 실천에 관한 評價와 督勵 義務를 教育部가 嚴正하게 直接 수행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국가 우수인재의 편중과 무리한 조기 진로선택 문제 등으로 인한 국가경쟁력 저하와 직결되는 소위 인기학과로 불리는 의/법학분야에 선진국의 세계적 추세이기도 한 專門大學院(Professional School)制度를 도입하기로 하였던



바, 현재처럼 동 분야를 학사과정에 두지 않고, 동 분야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다양한 타 분야 학사과정 졸업생이 진학할 수 있도록 대학원 단계에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문대학원제도 도입을 통해 BK21의 위 첫째·둘째 정책과 연계되어 2002학년도 서울대의 大入制度改革 先導(서울대 의/법학분야의 경우, 본격적인 전문대학원 체제에는 못 미치고 전 단계로, 학사과정 신입생 모집단위 광역화로 각 자연계열, 사회계열에 포함된 형태로 第4協約 체결)와「新 進學模型 構築」이라는 단위정책 목표 구현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서울 등 수도권 소재의 서울대 등 세칭 일류대 진학지상주의, 인재독점 문제와 이에 반비례하는 수도권외 지역 대학관련 지역사회 낙후문제를 극복하여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재들이 全國 地域別로, 專攻/職業別로, 學士過程/大學院 段階別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각자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大學 進學 및 專攻/職業 選擇 機會를 擴張하려는 BK21 最終目標을 달성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외에도 第5協約 : 산학협동관련 Matching Fund 등, 第6協約 : 국제협력, 第7協約 : 자립기반조성과 그 외 병역특례 확대 등의 주요조치가 있었다.

3. 大入 修學能力試驗 發展政策

'98. 7월 서울대 총장공관에서 교육부장관과 서울대총장 공동의 입시개혁관련 회동에서는 서울대의 2002학년도 신입생 전형은 대학 측의 무시험 즉 현행 논술 등 본고사로 불리우는 대학 출제의 일체의 지필 시험이 없고 출신고교 학교장 추천 입학제의 전면확대 방식으로 개혁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 공표 함으로써, 예상되어지는 선발근거이자 주요 兩大 大入銓衡資料로서 出身高校의 學業內申成績과 함께 教育部 주관의 '98년 당시 大學修學能力試驗制度를 동 改革方向과 부합하는 發展政策을 구안하였다.

이의 주요사항으로 대입과외를 억제하고 高校 公教育의 正常化 施策의 잠정적 첫 단계로서 辨別力 論爭을 무릅쓰고 ① 대학수능시험의 出題範圍를 高등학교 公教育過程의 教科書 內로 限定 유지하는 정책, ② 대학 측의 논술·본고사 폐지에 따라 出題節次와 方式과 관련하여, 김영삼 정부 시절 시험문제 유출로 대 혼란을 겪는 등 대입수험과 관련된 검은 사슬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현재까지 중앙정부 교육부의 최우선 연례 단순반복 행사에 기인하는 등 평가 시험의 결과에 있어 學年度間 信賴性을 확보하지 못하는 근본적 결함을 지니고 있음과 동시에 시험 시행에 있어서도, '단 한번으로 전국이 일제히'로 대변되는 현행 대입수능제도를 미국의 SAT제도와 같이 평가의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는 問題銀行(Item Bank) 出題方式을 구축하여 대학진학 희망학생이 본인 사정에 맞추어 대학 수능 이름 그대로 본인의 대학에서의 수험능력수준을 측정할 수 있도록 大學修能試驗을 年中 複數/定期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수시로 분산되어' 이루어지게 하는 관련 정책, SATII와 같은 에세이, 주관식 과목별 평가 등이 포함된 수능II 제도 도입 등 현행 大學修學能力試驗 發展政策 그리고 대학별 자율일임의 현행 대입전형관리 관행의 투명성 제고와 관련하여, 진학희망 학생측의 불합리한 비용부담, 진학정보입수 불편 등의 문제해소를 위하여 독

일 등의 예처럼 大入制度 관련 中央管理로서 現 大學教育協議會의 活用 등을 집중 검토하였다.

4. 高校內申 政策

서울대 등이 2002학년도 대입제도개혁을 선도함에 있어 학교장추천입학제 전면확대로 방향을 정함으로서, 고교생 등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 進路/進學관련 主導權이 所屬學校의 敎員에 부여됨으로써 學教 公教育 正常化 조치의 최우선사항이 확보되었던 것이다. 앞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고교내신과 함께 양대 전형자료 중 한 축인 대학 수능시험의 출제범위를 이와 동일선상에서 변별력 문제에도 불구하고 굳이 고교 공교육과정의 교과서 내로 한정하였던 것도 결국 고교 3년간의 일차적 평가인 출신고교 내신의 중요성을 再강조 함으로써 학교공교육 밖의 사교육/과의수요를 최대한 억제하여 學教 公教育 正常化를 加速케 하려는 정책적 의도였다.

중래의 결과 중심적이던 평가방식을 보완하기 위하여 학업수행의 過程 中心적인 隨行評價 政策을 도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학생의 소질/특성에 대한 지도교사의 서술식 평가가 학생생활기록부에 작성되어져 교장추천의 주요한 근거가 되게 하였다.

당시 비교내신제 -고교생별 내신성적을 수능 시험결과와 연계하여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로서 기실은 학교간 학력차를 인정하여 학력 우수학생이 집중되어 있던 특수목적고 즉 외국어고, 과학고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어지다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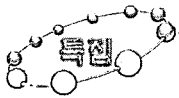
정부 출범 직전 폐지된 제도- 가 폐지된 상황에서, 앞에서 누누이 강조한 바와 같이 2002학년도 대입제도 개혁조치에 있어 서울대 등의 대입제도개혁과 함께 고교내신이 주요 핵으로 등장함에 따라 全國 高校別 內申 客觀性 確保를 위한 후속조치가 개혁성패의 관건이 되었다. 우리는 전국 학교 공교육 과정에 대한 국가주도 정부관리체제(National Based Curriculum)를 채택 시행함에 따라 당연히 공교육 학교현장에서의 동 교육과정 이행에 대한 점검평가를 하여야 할 국가의무이행과 함께 교육과정의 이행 결과 성적을 지닌 내신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부 주도 國家水準의 全國 高校對象 定期 學力評價制度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5. 學校運營委員會 政策

위에서 수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동 개혁정책의 초점이 교장추천제에 있게 됨으로서, 내재의 내신관련 후속시책 강구 등과 함께 동 推薦의 主體 및 節次의 客觀化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확산 설치와 참여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고자 했다. 학교조직의 궁극적 목표인 소속 학교 학생의 진학/진로선택 관련문제에 학교운영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실질적인 참여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명실상부한 공교육 정상화의 초석이 된다고 본 것이다.

IV. 現況 및 課題

結論적으로 綜合하여 보면, 이상의 21C 지식 기반사회의 세기사적 大변환의 역사를 주도하는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엔진으로서 창의적



이며 국제적 수준의 고등 인력양성을 위한 Brain-Korea 21 대학(원)관련 개혁정책부터 마지막 학교운영위원회관련 정책까지「국민의정부」의 '일단'의 교육개혁관련 綜合政策은 주요 單位政策 들로 면밀히 상호연계 구성되어, 동전의 양면이라 볼 수 있는 초·중등·대학(원)을 포괄한 國家 公教育의 競爭力 提高 및 正常化를 實現하여 年 20여 조원의 私教育/海外教育費用負擔으로 대변되는 國民 苦痛과 知識/技術의 海外從屬의 根源의 遮斷에 最優先 政策目標을 두고 추진했던 것이다.

그러나, BK21이 1년 6개월 여의 기획기간을 거쳐 '99년 6월 사업 공고 후 2001년 현재 사업 추진 2차년도 초기시점에서, 일부 대학에서 대학원생 지원비의 유용 사례를 중심으로 산학협동/국제협력 추진에 있어 극히 부진한 실상이 언론에 보도되고, 서울대 등의 2002학년도 대입제도, 대입수능시험의 변별력 문제 등 관련 발전정책, 고교내신 관련/수행평가/학교운영위원회 관련 후속개혁조치의 지연/축소와 더불어 각종 제도개혁 협약사항의 이행실천 관련하여 철저하고 엄정한 관리평가체제 미비 등으로 BK21의 기획 근본취지 및 역점사항들이 퇴색되는 크게 우려하여야 할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BK21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일단의「국민의정부」교육개혁관련 綜合정책들과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BK21관련 개혁정책과 주요 단위 정책들이 어느 하나라도 정상궤도에서 이탈되면 도미노처럼 相互 惡循環을 초래하게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상기 명시된 BK21관련 主要原則/推進方式의 遵守 俱現과 「국민의 정부 教育改革

綜合政策관련 主要 單位政策의 後續措置를 適時에 지속적으로 一貫 推進을 토대로 정부-대학간에 協約 형태로 체결한 모든 制度改革事項의 履行實踐에 대한 엄정하고 철저한 評價管理體制 구축과 집행을 위하여 政府는 모든 정성과 각고의 인내로써 대학의 참여 교수들 및 젊은 인재들의 의지와 노력과 맞물려 추진함으로써 후일 歷史的/時代的 所任에 매진 한 行政部處의 公職集團으로 評價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BK21과 교육개혁관련 일단의 綜合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위의 모든 개혁정책의 성과들은 총체적인 國家競爭力 強化와 國家 公教育 內實化로 이어져 우리 나라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人的資源 知識/技術強國으로 跳躍할 수 있는 基盤이 될 수 있는 것이다.